

野, 이재명 강조해온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

공소시효와 손해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이재명 "국가범죄 시효 없애는 문제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

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하지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

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반복될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범죄 시효에 대한 특별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스' 방송에서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근대, 현대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이슬기자

민주, 대통령실 불법 이전 의혹 "감사원,尹 눈치 보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 지연을 규탄하면서 "더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권철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의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의원은 "감사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국회에는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왔다'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권철승·박주민·참여연대 합동 기자회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 미뤄"

그러면서 "감사원이 전례없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의심받고 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자인했다"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실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수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이면 충분하다,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말이 부끄럽게도 관련 예산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게다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예산이 전용돼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사적 관계로 얽혀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과거 운영할 당시 전시회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였다. 심지어 이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로 밝혀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불법 의혹의 진상 규명과 예산 낭비를 막으라는 국민감사청구권들과 시민들의 뜻을 무겁

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감사원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감사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민주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해당 감사를 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진전이 없다면 민주당 법사위 차원에서 뭔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실 및 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시민 700여 명의 이름으로 제출했다. 이후 감사원 측의 보완 요구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정리해 지난달 25일 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회신에 기일이 소요된다는 등을 이유로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됐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재환기자

野, '대장동 특검' 다시 꺼내 "尹 대통령, 특검 수용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난 3·9 대선 과정에서 제기했던 '대장동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역공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땀땀하다면 조작·편파·보복 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제기된 대장동 재개발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윤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말한 김만배씨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녹취한 것에 관심 없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사단이 주축인 검찰 수사팀은 범죄자들의 진술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정치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TV 토론 영상을 틈 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마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대장동 사건의 씨앗 자금을 만든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검사가 윤 대통령이었고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50억 클럽 회원'이라며 '대장동 주범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박 특검 등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을 거부하는 국민의힘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은 필생의 역작이었을 것이다. 역작이 역적으로 불리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다"며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않고 50원도 받은 증거가 없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 역모를 막으려 했던 사람을 처벌하라고 소리치는 이런 역설의 모순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상상 해봤다"며 "이런 희극적 비극은 반드시 그 진실이 시간이 더디더라도 결국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